

일반
논문

제도화된 청년 활동과 지역공동체 민주주의의 가능성*

서울시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에서의 민주적 수행성
정치의 전망

권유미 _연세대학교 석사

임유진 _고려대학교 학부과정

논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를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영토로서 등장하는 '공동체적인 것'과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경험하는 '청년'이 결합하여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역혁신청년활동가'가 공동체적인 통치기술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된 주체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실제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활동하여 관찰한 결과 및 동일한 조건에 놓인 여타 활동가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실제 활동의 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적 갈등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들이 해당 제도 내에서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수행적 모순'이 청년이라는 육체를 관통하는 공동체적 통치기술에 저항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내의 정치적 가능성이자, 동시에 공동체 외부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수행성 정치'의 전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주요어:**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마을공동체, 수행성 정치, 통치성, 수행적 모순

* 본 연구는 권유미의 석사학위 논문 『청년 호명과 주체의 전유: 서울시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를 중심으로』(2018)를 보완, 발전시킨 것임.

DOI: <http://dx.doi.org/10.31008/MV.39.6>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청년에 대한 위기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활동하는 청년’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대안적 노동(박주연 2010; 김현민 2012)을 찾고, 새로운 정치 형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김소연 2013), 사회문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고(박은진 2012), 진정성을 추구하는 주체들(류연미 2014)로 표상되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은 특히 그 공간적 거점을 지역공동체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다.

‘활동하는 청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는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 활동가 양산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사업은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시민 참여형 행정기관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두고, 호혜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중간자 역할로 2013년부터 ‘지역혁신청년활동가’를 고용하고 있다. 청년들은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지역에서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명으로, 그리고 청년 자신의 삶에서는 대안과 주체성 발견이라는 기대로 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경험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함으로 대변되는 청년들과 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적인 것’을 결합하고자 하는 하나의 실험적 상상인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는 마을공동체와 청년의 결합을 ‘통치’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의미를 달리한다.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효과(김우영 2013; 신중진 외 2013; 여관현 2013; 오완석 2013; 김권수 2014; 김수영 외 2014; 이왕기·정승현 2014; 하현상·이기태 2017)와 ‘활동하는 청년’의 청년실업 해소의 효과(이신모 2009; 박찬주 2010; 박해금 2011; 윤재호 2014)가 조우하여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제도가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민주적 과정과 현장에서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이해 없이 관 주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는 불안정한 경제적 노동구조를 포함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영역을 보완하는 ‘파트타임(part-time)’적인 통치 기획이자 정치적 문제의식이 ‘모순적인’ 주체 생산의 기술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필자가 실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서울시에 고용되어 약 9개월간 직접 활동하며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 만난 ‘고용된’ 청년 활동가들은 실제 다양한 행위 양상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실제 활동의 내용 간의 복잡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육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모순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통치성과 수행성이 얽힌 장으로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제도의 비

관적 재구성과 민주정치의 전망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등장과 청년 고용정책의 흐름을 각각 계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 둘이 ‘지역혁신청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결합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이 청년 활동가라는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생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청년 담론을 분석한다. 셋째, 제도 외부의 통치성과 내부의 수행성이 교차하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수행적 모순’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가능성 또한 발견해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에서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가 더욱 시민 중심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도록 수행성 정치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를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3단계의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청년과 마을공동체가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분석하고, 그 제도의 등장이라는 사건에 내재된 통치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보학적 작업을 시도한다. 푸코의 계보학은 “단순한 역사적 접근방식이 아니

라, 한 사회 안에서 형성된 이른바 과학적 담론이 갖는 고유한 권력의 효과에 대항하는 ‘비관’이라 할 수 있다”(신충식 2010, 134). 이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개한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사회’의 확장과 ‘청년 실업’에 관련된 정책 문건과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및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문건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활동하는 청년이라는 주체 생산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서울시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홍보 자료집을 활용하였으며, 필자 역시 약 9개월 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관찰 및 기술한 내용 또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고용된 청년 활동가들의 경험과 그로부터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혁신청년활동가’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필자의 현장 참여관찰도 포함하여, 청년들이 제도로 진입하게 된 동기와 이들이 반복적인 제도 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정체성, 그리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론이다. 2016년 1차로 여덟 명의 활동가와 면담을 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추가 면담자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1차 면담자들 중에서 2017년에 활동을 연장한 청년들을 통해 두 명의 청년들을 소개받아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자들은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제도가 정의하는 ‘청년’인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 4명과 남성 6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울시 내 다양한 활동지역 분포를 가진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름은 가명이다.

〈표 1〉 면접대상자의 기초적 인적 정보

	이름(가명)	성별	연령대	학력	활동지역	사업장 형태
1차 면담자(2016년 활동)						
1	혜영	여	20대 후반	검정고시/ 대학 휴학	마포구	시민단체
2	윤재	남	30대 초반	대졸	마포구	시민단체
3	희수	여	20대 중반	대졸	영등포구	마을살이
4	영표	남	30대 중반	대졸	영등포구	시민단체
5	진희	여	30대 후반	대졸	관악구	사회적 기업
6	철주	남	30대 후반	대졸	용산구	마을살이
7	준웅	남	20대 후반	대졸	도봉구	마을살이
8	소민	여	20대 중반	대졸	금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차 면담자(2017년 활동)						
9	세윤	남	20대 중반	고졸(대안학교)	은평구	시민협력플랫폼
10	우찬	남	30대 중반	대졸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

2) 분석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지역혁신청년활동가’가 ‘마을공동체’라는 특정 통치기술(테크놀로지)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생산된 주체’이자,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구성된 주체’라는 이론적 배경을 갖는다. 먼저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을 푸코의 통치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푸코는 통치의 개념을 자아의 기술, 지배의 기술, 주체의 구성과 국가 형성 간의 관계를 연결시킬 때 활용하며(정수

남 2014, 300), 이때 통치기술에는 담론, 제도, 법, 규범, 가치 등이 포함된다. 통치기술은 사회적 육체를 생산하는데, 푸코는 “권력이 배제, 억압, 검열, 축출, 위장 은폐하지만 동시에 사물들의 영역과 진리의 의례들을 생산한다”고 말한다(푸코 1991, 194). 즉 권력이 단순히 억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권력통치기술에 의해 효과가 발휘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요구와 주장도 생겨나는데, 이는 권력을 강화시켜주던 육체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단 육체를 관통하여 권력의 효과가 발휘되고 나면 권력은 역으로 그 육체 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푸코 1991, 85). 그렇다면 경험 세계에서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에 의해 권력의 효과가 발휘되고 해당 제도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던 ‘지역혁신청년활동가’라는 육체가 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과정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행위자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버틀러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 버틀러에게 행위란 “수행되는 것”(버틀러 2008, 77)으로, ‘사회적 육체의 행위’가 ‘수행적 행위’라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가 규제된 반복을 통하여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틀러에게 수행성이란 “행위의 반복적 수행이다”(조주영 2014, 86). 그는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하여 여성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와 같은 논의는 청년 정체성이나 활동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수행’의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수행성과 저항 간의 연관 관계는 버틀러의 ‘수행적 모순’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버틀러는(푸코의 통치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는) ‘수행문’²⁾에 의해 ‘반복되는’ 수행적 행위가 육체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사회적 육체를 생산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투쟁과 재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버틀러 2016, 296)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그녀는 “기존의 관습들에 의해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온 주체들이 보편적인 것에 의해 은폐되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과거의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습적 공식들의 모순적인 성질을 폭로함으로써, 참여의 언어를 장악하여 어떤 ‘수행적 모순’의 운동을 시작하는 상황”(버틀러 2016, 172)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보편성에 대한 현재 규범들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식에 해당한다”(버틀러 2016, 172)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수행적 모순이 없을 때 변혁적 급진정치도 불가능하다”(버틀러·스피박 2008, 66)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은 수행적 모순이 “지배적 언어를 바꾸어내고 권력관계를 다시 쓰게”(버틀러·스피박 2008, 67) 만들며, 이는 곧 기존 수행문의 실패와 동시에 새로운 수행문이 작성됨을 의미한다. 즉, 수행적 모순에 의하여 수행문은 ‘탈공식화’, ‘탈전유’ 혹은 ‘재전유’될 수 있는 것이다(버틀러 2016, 297-298).

2) 수행문은 권력의 통치기술이다. 즉 육체가 따라야 하는 권력이 생산한 일종의 대본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지역혁신청년활동가제도’에서 ‘제도’와 함께 생겨나는 담론들이 수행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았을 때 ‘지역혁신청년활동가’는 제도 차원에서 통치성과 행위 차원에서 수행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담론을 실천하고 행위를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고정된 주체가 아닌 ‘구성된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은 권력의 통치기술에 대한 저항 가능성과 반복되는 ‘수행’에 의해 이미 구성된 정체성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상에서 본다면 ‘지역혁신청년활동가’는 공동체적 통치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공동체적 수행’을 반복하여 구성된 ‘청년’ 정체성으로서, 지역 혁신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육체일 것이다. 이때 ‘반복되는 수행’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지점이 중요해진다. ‘공동체적인 것’이 제도로 등장한다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것의 문제영역에 대한 저항 혹은 대응으로 등장한 ‘공동체적 기술’이 새로운 통치성과 특수한 수행문으로 작동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통치 전략의 목표로서 ‘사회적인 것’을 ‘공동체적인 것’이 대체하고 있다고 논의한 로즈(Rose 1996)는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영토로서 ‘공동체적인 것’에는 ‘사회적인 것’과 구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국지적이고, 이질적이고,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탈총제화’된 공간적 특성이며, 두 번째는 주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치하고, 행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도덕적 개인으로 설명하는 행위자의 새로운 윤리적 지각으로서의 특징이다. 마지막은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관계를 제시하는 동일시의 역할이라는 특징이다. 그리하여 로즈는 경제 통치가 탈사회화하고 있으며, 주체들은 스스로 경제

적 통치성의 공간에서 능동적 행위자가 되고, 여기에 이를 관리하려는 여러 어휘들과 장치들이 새로이 동반됨을 역설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언급한 통치성, 수행성 개념과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와 ‘지역혁신청년활동가’를 분석함에 있어 제도의 ‘공동체적 통치성’과 그것이 생산한 공동체적 수행문을 반복 수행하여 행위자에게 형성되는 ‘공동체적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기존의 통치성과 수행성의 특징에 앞서 언급한 ‘공동체적인 것’의 특징이 추가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수행적 모순에 의한 변혁적 정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특히 본 연구의 인식 관심인 ‘지역혁신청년활동가’들이 제도, 즉 수행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수행적 모순의 구체적 성격은 어떻게 나타날까? 또한, 공동체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에는 어떤 새로운 정치적 전망이 있을까?

3.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 등장의 계보학적 단사

1)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영토: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민참여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민을 육성”하고 “주민

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4, 12).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양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작동은,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회정책의 흐름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핵심 내용으로, 지금 논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그 흐름이 ‘지역’이라는 공간적 무대로 구체화되어 집약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기조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동시적 모색, 그리고 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생산적 복지’는 이전까지의 수급 방식처럼 “개인이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증진”(조영훈 2000, 90)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책임의 소재는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요구되었는데, 같은 시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자활 급여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의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2000; 홍경준 2000, 229 재인용).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의 분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실시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등의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확장·강화시키는 제도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후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등의 정책은 복지의 시장적 방식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민간

공급자가 경쟁을 통하여 그 질을 높이기끔 유도하고, 한편으로 그 공급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복지의 구매자들에게 제시되는 순환 구조를 장려한다. 이처럼 복지가 일종의 사회적 ‘투자’와 ‘서비스’로 대체 및 재개념화되는 과정은 ‘사회적인 것’이 ‘유사시장영역’(김성운 2013; 서영표 2013; 조문영·이승철 2017)으로 재편되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성되는 과정이었다.

한편, ‘사회적인 것’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국가뿐만이 아닌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거시적·미시적 쟁점들이 운동 목표로 등장”(정태석 2005, 141)하였고,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및 노동운동 등의 구사회운동이 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신사회운동으로 이동하는 ‘전환’이 이뤄진 때였다(주성수 2017, 71). 여기에는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이후 시민사회 공간의 확대에 따라 스스로의 역할과 개별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했던 관변 단체 및 반정부 단체의 위치 재설정이 한몫을 하였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시민단체는 복지 및 지역으로 그 공간과 관심을 이동하게 되었다(홍경준 2000, 230).

따라서 각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사회’에 대한 상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복지 중심으로 결합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체의 본격적 시행과 성미산의 사례 등, 국내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사례의 유입은 지자체를 거쳐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시민활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협치’를 기치로 하

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2012년 출범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흐름에서 현 사업이 내세우는 ‘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누가 책임의 ‘주체’로 호출되고 있는가?

먼저 서울시의 대표사업인 ‘서울시 지원사업’의 항목에는 ‘이웃 만들기’, ‘육아·교육 공동체’,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골목·마을 계획’으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의 사회정책이 주로 집중해왔던 영역으로서, 기존의 시민단체와 제도화 이전의 마을공동체가 수행했던 사회운동이나 권력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자리, 그리고 빈곤이나 불평등 등에 대한 기획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정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공의 목표 아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이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회복’은 사업의 핵심 가치이면서 실제로 주민 사업제안서의 심사 항목, 즉 “사업의 필요성”, “지속 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2, 80). 이러한 구조에서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 직접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라는 이름의 자발성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발성의 구조는 다양한 이슈 제기와 집단의 정치적 힘을 통한 해소가 아닌 특정하게 기획된 권력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에 한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만 유효해지며, 이러한 점에서 주민 개인들은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오인하는 틀에 포섭되어 그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통치 영토로서 로즈가

말한 ‘공동체적인 것’이 등장한다.

2) 잉여와 효용 사이의 노동인구: 청년

마을공동체 사업이 ‘뉴딜일자리’라는 청년고용정책을 통해 청년을 호출함은 단지 그 주체에 기대되는 역할의 차원을 넘어 국가(혹은 서울시)가 불러들이는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배경, 그리고 그 호출의 의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따라서 사회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청년이 어떤 필요로서 강조되어왔고, 거기에는 어떤 정책적 권력이 접목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해왔는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를 선포한 문민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신인력 정책’을 발표한다. 이 ‘신인력’이란 적극적, 창조적인 노동 인력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방면에서 집약적이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업무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유형의 핵심 노동자”(강수돌 2002, 83)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시장 주변부의 인력, 즉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근로자과건법, 시간제 취업 관련법, 가내근로법”(강수돌 2002, 98) 등 법제화를 통해 비전문적이며 불완전한 고용 형태로 유도된다. 핵심 인력과 비핵심 인력을 분류하여 전자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후자는 합법적으로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대상화하는 이 정책의 의도는 경제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자 동시에 그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있으며, ‘자본’으로서의 개인을 명제로 삼고 이 개인들의 시장경제 체계에서의 생산성 여부를 감별하여 최대의 효율을 꾀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일자리 감소라는 여파 속에서, ‘청년실업’은 정부의 ‘국가 생산성 저하’라는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학 졸업생들이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관계부처합동 2003, 2)에 있다는 분석에 기반하여 비정규 및 사회적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메인 노동시장’의 경쟁으로부터 탈락한 이 노동력을 ‘다른’ 영역으로 유도하여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청년고용정책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그 방식에서 변화를 보인다. 이는 2008년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는 청년 기업가 육성이나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창직·창업’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그 창업·창직의 분야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청년들이 혁신적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벤처 경연대회’ 지원, 창업자금 대부” 등, 즉 ‘사회적인 것’에 집중되면서 고용정책에서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이 기존의 경제적인 것에서 일부 사회적 것으로 이동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0년 개정되어 그 정의가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지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청년 창직·창업의 “블루마켓”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그리고 그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의 청년”이 부각되기에 이른다(류연미 2014, 43).

그러나 이 정책 프레임의 전환에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실업 청년에 대한 ‘자본’으로서의 쓸모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던 과정,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 통치 권력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을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주체의 공급을 필요로 했던 흐름을 대입시켜본다면, 이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창출이자 ‘새로운 주체’ 생산으로서의 정책이다. 즉 이 전환이 가져온 성과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이라는 주체의 정책적 발명과 그 성공적 대입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서 2012년부터 닦을 올린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대책은 기존 청년 관리 전략의 그 집약적 실현이자 구체적 적용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 첫 모습을 드러내는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확산”이라는 시의 5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부터 신규 추진된다. 이는 사회의 확장에 따라 필요해진 주체를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직업화’시키는 기획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도화된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혁신청년활동가’에게

주요하게 요구되는 역할로서의 ‘혁신’이 서울시에 의해 매우 한정적이고 특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는 혁신을 “사회 문제나 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의 변화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필요”(서울연구원 2013, 21)함을 언급하면서 반란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로써 마을공동체라는 ‘공동체적인 것’과 청년 육체의 결합에 의해 ‘활동가’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던 참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정체성은 약화되고, 나아가 ‘지역혁신청년활동가’라는 명칭이 관이 주도하는 제도에 의해 일자리의 재의미화 과정을 거쳐 청년에게 주어진 명함일 때, 이는 단순히 그 업무의 내용을 가리키는 명칭을 넘어 수행자의 역할과 행위를 지휘하는 ‘표준화된 정체성’으로서 적용된다. 결국,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는 소위 그 청년다운 “창조적인 눈과 젊은 상상력, 도전정신”(서울연구원 2013, 34)을 가지고, 그러나 한정된 공동체적인 것의 개념 안에서 평화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특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시하는 통치기술이 된다.

4. 활동하는 주체 생산의 통치기술

1) ‘활동하는 청년’ 표상

그렇다면 서울시가 ‘활동하는 청년’ 담론을 통해 이들을 전제하고

표상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먼저 여기에는 청년들, 즉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소위 ‘루저’로 통칭되는 계층들이 가진 잉여력을 사회 혁신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하며 “자신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찾고 사회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하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유창복 2014, 317). 그리고 이는 ‘불안에 싸인’ 청년 세대를 마을 일자리라는 ‘대안’으로 눈을 돌려볼 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결된다.

그가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30만 원이다. 적은 돈이지만 동네에서 그리 궁상맞지 않게 살아갈 만한 수입이다. 교통비를 절약하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니, 나가는 돈이 많이 줄어들어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마을살이 하기 전에 180만 원 벌 때보다 오히려 윤택한 것 같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a, 48).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의 호기심과 필요로 시작해보는 거다. 무언가를 마련하고 해결해준다는 태도보다는 내가 재미있고 내 문제와 나의 필요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중략) 누군가를 춤추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춤을 춰야 한다.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려면 내 안에서 먼저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 (중략) 또한 스스로 즐거워야 누굴 닦하지 않는다. 비록 결과가 실패라 해도 당초의 출발이 나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a, 50).

이는 모두 '나의 필요'라는 중심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욕망을 축소하는 삶을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청년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결과마저도 책임지는 '기업가적 주체'로 변모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청년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치 전략이란 '나의 필요와 선택'이라는 빈약한 자유를 통해 작동하면서 대안적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청년을 마을로 유입시키고, 그 삶의 결과도 스스로 짚어지는 주체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먼저 춤을 춰야' 하는 자발성을 수취하는 논리가 되면서 청년을 '사회혁신의 주체'로 호명하는 당위성과도 마찰 없이 연결된다.

기존의 담론이 이처럼 청년을 대상화시키는 방식의 타자성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실제 청년 활동가들의 언어를 담고 있는 주요 텍스트 『자립, 탐구생활』(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에서는 그 의미론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다. 청년들의 발화에서 '활동'이란 노동의 차원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고 "재미"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삶"의 주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되면서(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38, 72, 97) 오늘날 청년들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과 조우한다. 주목할 것은 이 '다른 삶'이 텍스트 안에서 '더 나은 삶'으로 부각 되는 방식이다. 활동가들은 주변의 다른 청년들이 "경제력에 대한 불안"을 안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묘사하면서, 상대적 만족과 "안타"까움 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성찰조차 회피"하고

있는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구별 짓기와 비교우위의 서사를 보인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124-126). 이러한 비교의 방식은 ‘희망적인 내러티브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청년을 평가하는 외부적 시선과 그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저희 아무것도 안 한 1년 동안 3세대가 사는 건물주분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계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제사하면 제사 음식 먹으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임대료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거든요. 그렇게 건물주가 사는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주와 엄청난 인연을 만드는 것이죠. 그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 어르신들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세요. 우리는 또 그분들께 자식처럼 챙겨드리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60).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지역분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리도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공공성, 공익성이 떨어지는 건 지역에 대한 리서치가 들어가면 굉장히 달라져요. 지역의 필요성을 알고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63)

「청년은 왜 마을에 공간을 마련했는가」라는 대담 자리의 “지속가능성은 가능한 질문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한 단체는 건물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임대료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어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다른 단체에게 기성 활동가는 “지역주민 분들과의 관계망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지역의 필요성을 알고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담화의 전개에서 후자의 단체는 ‘지역의 필요성’과 같은 ‘마을공동체적’ 방식의 고민이나 ‘리서치’와 같은 기술 활용의 시도가 미흡한 것으로,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전자의 경우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활동에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에 대면한 청년들에 대해 텍스트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당면하는 어려움 또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나아가 그것이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 향상을 통해 “공공성, 공익성”과 같은 가치도 동행시킬 것을 요구한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63). 그리고 이들은 담화를 이끌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선배 활동가의 평가에 의해 일반 청년과는 다른 성숙한 개인들로서 우등한 위치를 부여받는다.

이런 친구들이 30~40대가 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에 있는데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쉬운 단어들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요(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64).

마찰 없이 “유연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태도를 가진 주체들로 요약된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청년 활동가들의 발화를 관통하는 테마인 ‘자립’으로 유도된다.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관계”를 통해 “자체 수익”을 만들어내며 “우리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삶을 선택한 데에 대한 “불안”이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b, 127-129). 요컨대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자립이란 국가 비용의 지출 없이도 ‘공동체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것을, 활동하는 삶의 개별적 유지를 위해 ‘사회’의 지속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년 관리 장치와 통치의 균열

‘지역혁신청년활동가’의 고용 주체는 두 곳으로,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과 내부의 뉴딜일자리 사업단,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들은 각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역할과, 활동가 교육 및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청년들은 두 기관 모두에게서 요구되는 내용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이 청년활동가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주체에 대한 통치기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시

에, 실제 행위자들이 역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먼저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청년에 대한 통치를 행사했던 사건은 특히 행정 권력의 형태로 드러났다. 고용된 청년들의 의무 중 하나는 매달 수기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정해진 근로일의 근무 여부를 활동가와 해당 사업장이 모두 서명한 후 직접 임금을 계산하여 작성하는 ‘근무기록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근무일지’, 그리고 ‘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중 근무일지는 주간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 기간 중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내려온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는 6월 사업 점검 및 평가를 명목으로 ‘뉴딜일자리사업 현장 점검³⁾’을 진행했는데, 이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중간 조직에 개선 사항으로 근무일지의 서식을 비교적 작성이 간단한 ‘월간’에서 매일의 업무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주간’ 형태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센터의 매니저의 공지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로부터 “점검 결과 (뉴딜사업장 전반적으로) 뉴딜 참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기 어렵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성

3) 현장점검은 일부의 대표 사업장에서만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팀 단위 방문이 이루어졌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이로 활동하는 면담자 혜영은 사업장을 방문한 현장점검 관계자들이 불신이 깔린 태도로 그녀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명목으로 출석부를 가져와보라고 강제하거나 수업시간이 되었는데도 보내주지 않는 등의 고압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음을 드러냈다.

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에 대해 활동가들은 근무의 특성상 매일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는 최초 서울시가 요구했던 상세 근무기록 양식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록 양식의 ‘캘린더형’을 센터가 제안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서울시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8월 임금이 일부에게 과다 지급되어 활동가들에게 추가금액 납부를 요청했던 사건이 그러했다. 그러나 매우 늦은 시간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착오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만을 요청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에 활동가들은 단체 대화창에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며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문장이 없네요. 떡 하고 문자 발송만 하고 끝내면 보낼 거라 생각한 걸까요? 전 안 보낼까 봐요ㄷ 급하면 전화 오겠쥬.
- 오후 10시 28분에 받았습니다. 임금 밀릴 땐 아무런 상의나 양해도 없고요. 본인 실수일 땐 문자 하나 떡 보내구요. (중략) 청년이 호구 입니까? 거 원순형 장난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 월급명세서 안 오는 것도 사실 이해 안돼요. 애초에 명세서 컷음 확인이 벌써 됐쥬.
- 아 저보고는 120원 과다납부 됐다고 내려여 하아...
- 웬만하면 부들부들 안 하는데ㄷ 정말 너무하신 듯

- 매월 지급액을 이렇게 보고까지 해드리는데 왜 무슨 실수가 생겼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현장점검을 비롯한 근무일지 변경 지침, 그리고 임금 소동 등의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서울시가 청년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가 고용자로서의 감시와 관리, 그리고 통제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용 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통치의 양태는 한편으로 청년 행위자들의 그 통치에 대한 저항의 틈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청년들의 반응은 단순히 불편함에 대한 불만을 넘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이는 다시 최소한의 권리와 인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저항의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즉 이제까지 논의한 청년에 대한 통치의 전략과 주체화의 기획은 동시에 그 실제적인 장 안에서 균열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수행과 그 저항의 문법을 관찰하여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5. ‘지역혁신청년활동가’의 ‘수행적 모순’ 경험

이번 장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공동체적 통치성’ 안에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라는 구성된 주체가 이 제도의 수행문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형성하게 되는 공동체적 수행성을 심층 면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통치 기획에 저항하는 수행성 정치의 가능성과 그 단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 가능성은 새로운 통치 질서로의 진입 동기를 통해 파악되는 생산된 주체로서의 통치 ‘수준’과 실제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수행성이 초래하는 ‘수행적 모순’에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반-자본주의적 동기와 생산된 주체 동원의 어려움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서울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정적인 공동체적 수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면담자들로, 마을공동체와 활동 담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반-자본주의적인 지원 동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먼저 마을살이에서 활동하는 면담자 준웅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 후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원”이나 “노동력”으로 보는 등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복지라는 가치가 무력화되는 현상을 겪으며 회의감을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재의 경우에도 스스로의 대학시절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더라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굉장히 몰든 상태”로 회상하면서, 먼저 취직한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음을 고백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선택은 “다른 방식의 삶(재울)”, 즉 기존의 통치기술에 대한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고 대안을 탐색하던 와중에 연결될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을 활동가로서의 현재의 경험은 그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나 “행복하고 삶이 더 나아”질 것(준웅)이라는 낙관, 그리고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좋은 일”(재울)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순응적 태도는 청년 자신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이 든 게, 약자의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 이런 분(활동가)들이 계시니까 사회가 그나마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청년들 돈을 적게 받아도 내가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면 사실 돈 필요 없거든요. 최저는 유지 해야지만, 근데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참 행복하구나라는 그 경험을 해버리면은 돈은 이제 후 순위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윤재).

지금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좀 시도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좀 많아져서 약간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

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크지는 않거든요. 느끼긴 하는데 그런 게 크지는 않아서. 오히려 좀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준웅).

이들이 보여주는 청년의 모습은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실패도 스스로 책임지는, 즉 ‘활동하는 청년’ 담론이 내포하고 있던 정체성과 일치한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무대에서 그 권력 기술 아래 충실한 공동체적 수행성을 보여주는 청년으로서, 성공적으로 생산된 청년 주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버틀러가 논의하였듯 “이미 확립된 담화에 ‘의지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행위”일 수 있다(버틀러 외 2009, 70).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발화를 통해 이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느끼는 수행적 모습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맞볼 수 있는... (중략) 지역혁신청년활동가는 어떻게 보편은 활동가로서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한테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시키는 것은 학대지 학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떠난다고 봐요) (윤재).

윤재는 같은 시기에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현재의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가 얼마 못 가 중단한 다른 청년에 대하여 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맛 볼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상품”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유형의 청년들에게 지금의 마을공동체는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윤재)이기도 하며, “아직은 실험적인 중간 단계”(준웅)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마을공동체에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가로 유입되고 참여해야 함은, 그들이 믿는 새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필요성으로서 제기되는 내용인 것이다.

2) ‘공동체적’ 가치 추구하고 대안적 노동 탐색의 실패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자본주의적 체계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그로부터의 대안적 동기를 가지고 마을공동체와 활동이 가진 담론 그 자체의 가치에 친화성을 보였다면,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활동을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했다. 먼저 마을축제를 기획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진희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활동에 진입하게 된 케이스였다. 그는 특히 환경 영역에 관심을 갖고서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비우는 등의 실천을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있는 면담자였다. 그에게 ‘지역혁신청년활동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일”

에 발을 들여놓고 경험해볼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접근성”이라는 기회로 작용했다. 한편 마을살이에서 활동하는 희수의 경우, 과거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맺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던 것을 활동의 동기로 들었다. 그는 지금의 활동 경험을 통해 후에 정신보건 “일”을 다시 하게 될 때에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드라마 “응팔’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기대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소민은 지금의 동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눈에 밝혀서” 활동가로 지원하게 되었던 배경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이를 ‘의미 있는 노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현장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낭만적으로 표상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환상과 그 실재 경험에서의 불가피한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주민들이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활동가들에게 이는 쉽게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희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변화야? 내가 그냥 하자고 꼬시고 하자고 하는 거지. 그냥 의제에 넣어야 되니까, 사업보고서 평가에 넣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면서 상상했던 공동체 회복의 그림이 현장과 불일치함에서 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은 나아가 본인의 행위를 기존 체계에서의 노동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지하게끔 만들었다. 청년들은 수차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회수)?”라고 자문하며 활동에서 추구했던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드러냈고, 현장에서 자신이 하게 된 것은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일”이었다며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활동가라는 걸 제가 면접 때도 활동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 봤어요. 그분들의 대답은 너무나 사전적인 의미죠, 뭔가 기존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활동가가, 그런 얘기의 답변을 면접 때 들었었는데 막상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일이더라는 얘기죠 일의 일부분(진희).

기대했던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이 제도적 활동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또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였다. 이들은 본인들의 활동이 “의무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주도적”이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환경임을 진술하면서, 따라서 자신이 “활동가는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소민). 이들에게 활동은 ‘대안’ 그 자체로서도, 대안적 ‘노동’으로서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으며, 결국 마을공동체 활동보다는 “11개월 근로”에 “퇴직금도 없고”, “쓰다 버리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다.

저는 그냥 낄 것으로 얘기하면 주체라기보다는 부속품 같아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뭐랄까요, 그냥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 같다는

게 어떤 거예요?) 돈을 주니 하는 희생? (중략)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누군가는 해야 했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난 돈 준다니까 껴서 와서 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비전이 없어서 부속품 같다는 거예요(희수).

이 “희생”이라는 표현 또한 꾸준히 언급되었는데, 진희는 마을활동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단체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혈의 느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게 자의적으로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좋은 일거리로 경험하게끔 해준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설득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을 경험하고 떠날 사람들도 있을 거라며 마을공동체 활동과 뉴딜일자리 제도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동 문법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에게 여전히 발견되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은 공동체적인 문화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당장 되게 짧은 계약직이잖아요 인식 개선이 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친해지게 돼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끝날 것 같은? (중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가면 만나도 ‘어, 안녕하세요’ 이럴 텐데 진짜 반가워하는 게 표정에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 ‘어 우리 밥 먹는데 밥 먹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소민).

이들은 공동체 외부의 소위 ‘계약직’처럼 헌신했던 지역공동체를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적 조건에 회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사건들이 가치를 부여하며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3) 환상 없는, 경제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앞선 두 유형의 청년들과 달리 활동에 대한 직접 경험이 사전에 있었던 면담자들로, 따라서 낮은 공동체적 통치성의 정도를 보였다. 이들은 ‘공동체적인 것’의 가치를 현재의 무대 안에서 실현하려거나 실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이자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를 단순히 일로서만 접근했다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하게 활동이 ‘익숙한’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서울시의 담론을 벗어나 마을 공동체를 비롯한 다른 여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이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먼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세윤의 경우, “비영리 자체에 대한 환상”이 없고 “마을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담론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를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하는 면담자였다. 우찬의 경우도 활동 이전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제공하는 단

체에 몸을 담았던 경력이 있었는데, 그 또한 ‘성미산마을’과 같은 특정 형태의 공동체가 사전교육에서 답사를 통해 모범적으로 소개되는 것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들이 가졌던 유사 활동에의 경험은, 국가 혹은 서울시의 담론에서 드러나는 사회 변혁이나 삶의 대안과 같은 가치들에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게끔 하는, 즉 통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지역혁신청년활동가’라는 정체성이 이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때, 이는 사회 혁신을 하는 당위적 주체로서의 호명, 그리고 대안적 삶의 담론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세운에게 활동은 “돈을 포기할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하며, 그 이상의 “특별한 사명감”이나 “정의”감 같은 것을 요구할 만큼은 되지 못했다. 그는 본인의 사업장 있는 기성 활동가들을 보며 “삼십 년, 사십 년씩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며 이 활동하는 삶이 본인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되지 못함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우찬 또한 “일단 돈이 안 된다”는 말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 없으며, ‘마을에서 활동하는 청년’의 이미지를 예시로 들었을 때에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돈이 부족하더라도 활동하는 삶의 가치를 긍정하거나, 기성 활동가를 롤모델로 삼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모습과 대조되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것’에 대한 환상도, 그 향방에 대한 특정한 기대도 없는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현 서울시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고정된 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려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중략)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고 그 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 상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관리하기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요? 지역에서 만들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아무래도 지역의 이슈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만들어지는 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딱 특정한 상을 놓고 이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상들이 변해오지 않았을까(세윤).

근데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동체성을. (위험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건 마을을 규정하는 거죠. (중략) 누가 어떤 마을활동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우찬).

이들은 서울시가 정해놓은 고정된 상이 실제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형성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염려한다. 이는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제도화된 ‘공동체적인 것’의 가치에 기대를 갖고 그것의 실현에 대해 모순을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오히려 제도화 이전의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선행되어 기대하는 바는 적었지만 ‘공동체적인 것’의 그 내용의 다양성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이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은 생존의 보장에 있었다. 이는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의 발화와는 달리, 아무리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이어도 경제적 조건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당장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만 보장이 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보장이 된다는 거는 먹고사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금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운).

4) 제도화된 공동체의 진정성 질문하기

앞선 청년들이 반-자본주의적 태도, 공동체적 가치와 대안적 노동의 추구, 경제적 생존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진

입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다소 느슨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면담자들이었다. 이들은 세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거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선행 인식이 있는,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이해도나 혹은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이 ‘공동체적인 것’을 직업으로서 경험했던 이력이 있는 반면, 이들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접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마을살이에서 활동하는 철주의 경우 과거 흥대 두리반 농성에 참여했거나 이태원에 있는 청년 공동체 주택에서 생활했던 경험 등이 있는 면담자였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표 또한 일전에 건너 알고 지내던 활동가들을 통해 이른바 정치적 성격의 조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모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 한편 앞서 첫 번째 유형이었던 윤재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혜영의 경우, 몇 년 전 마을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예술 작업에 참여했던, 그러나 ‘공동체’라는 규범 자체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던 노마드적 성향의 면담자였다. 지금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히 혜영에게 매우 부자연스럽고, 목적을 위해 맺는 관계로서 비판적으로 접근되고 있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자연스러운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드는 방식에서, 그걸 가져야겠다고 해서 다시 만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런 게 만

약에 공동체라면, 왜냐면 공동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게 뭔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일부러 더 관계를 맺어서 필요에 의한 관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더 큰 거예요(혜영).

동일하게 영표 역시 “작위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지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현 사업의 한계와 모순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 네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현재의 공동체적 움직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제도화된 대안적 공간인 ‘새로운 무대’ 안에서 ‘구성된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공동체적 수행을 통해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을, 혹은 ‘우리’ 공동체 활동이 가지는 명암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이 골목길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예쁘게 올 한 해 사업으로 할 건데, 그러면 저기 항상 노숙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 다른 데로 가야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깨끗해지고 하면 그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실 거란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하건 간에 누군가는 계속 배제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동체라는 건, 모르겠고 그냥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공동체? 마을 사업이라는 것도 되게 조금은 의문이 가는 게, 이 마을을 되

게 좋게 만든다는 게 배타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마을이 아니라 ‘우리’ 마을. (중략) 그래서 공동체의 범위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엮으면 엮을수록 모두를 다 엮을 순 없으니까, 엮인 사람들만 되게 끈끈해지고 엮이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소외되는 느낌도 받아요(영표).

담론화된 ‘공동체’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 그 모순과 배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들의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다. 영표는 활동지역과 다른 그의 실제 거주지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건을 들려주었는데, “내가 잘못해서”라고 본인의 경험을 자책과 반성으로 돌아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활동지 주변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기왕이면 여기 마을 사람이 돼서 같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대답한 그의 결심은, 활동 영역과 청년 자신의 일상 영역을 물리적으로 일치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그리고 반복되는 수행의 과정에서 목격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신의 통치된 육체에 기입하려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제도화된 사업을 넘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재점검하고 모두의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음의 철주의 발언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고용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보자고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을 운동이라든지 마을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현장에서 볼 때는, 또 저 개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을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마을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해결하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달라진 현실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까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철주).

그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 내용과 본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원인 또한 “고용관계”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용한 주체들의 방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즉 그것이 단지 “이 마을 운동이라든지 마을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공동체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나아가 이들 네 번째 유형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이 통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대안적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는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것’이 몇몇 ‘공동체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계보학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지역혁신청년활동가’의 활동 무대인 마을공동체는 기존의 ‘사회적인 것’의 통치 영역을 ‘공동체적인 것’으로 대체한 새로운 영토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가 점차 사업화되어가는 과정은 잉여와 효용 사이의 노동 인구로서 파악되던 ‘청년’이라는 육체를 ‘활동가’로 호명했다.

둘째, 이에 따라 ‘활동하는 청년’ 주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활동하는 청년’이 가진 표상은 마을에서 일하는 대안적 삶을 강조한다. 이는 특히 당사자적 언어의 텍스트를 통해 더욱 강화되며 ‘다른 삶’으로서의 ‘활동’은 여타 청년들과의 구별짓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그리고 제도는 청년들을 활동하는 삶의 개별적 유지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도 책임져야 하는 역할로 유도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지역혁신청년활동가’가 ‘공동체적 통치성’과 그것이 의도하는 공동체적 육체의 반복적인 수행문 경험으로 ‘공동체적 수행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한 현장에서 이들은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수행적 모순은 ‘지역혁신청년활동가’가 되기 전과 후에 경험하는 외부의 통치기술과 내부 수행문의 간극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적인 것(제도)’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은 공동체 외부의 권력 효과와

관련하여 ‘수행적 모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 혁신청년활동가’ 제도의 ‘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효과가 필연적으로 불러내는 ‘수행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에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들이 역동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면담자들이 경험하는 수행적 모순이 개별적인 수행성에 의해 나타난 것임에도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는 수행성 정치의 민주적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반-자본주의적 동기를 가지고 생산된 주체 동원의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활동가 집단 외부의 다른 청년들과, 활동가이지만 자신들만큼 ‘공동체적인 것’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활동가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좀 더 제도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통합되길 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 내의 구성원들을 ‘통합’하기 위한 의제설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했으나 대안적 노동 탐색에 실패한 두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공동체적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나름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제설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의 활동 경험은 공동체 외부의 노동 경험과 달라야 하고 나름의 문화적 원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의 ‘문화 확립’을 위한 의제설정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환상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세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관 주도의 공동체적 기획을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여기며 그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3) ‘지역혁신청년활동가’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의제 설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제도화된 공동체의 진정성을 질문하는 네 번째 유형의 청년들은 진정성을 갖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위 유형은 무엇보다 ‘활동가’라는 정체성과 ‘공동체적인 것’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즉 이들은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4)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의 진정성 있는 ‘목표 설정’을 위한 의제 설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관이 의도한 여러 통치기술은 도전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는 활동가들의 ‘경제적 생존조건’ 보장과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론’화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통해 공동체 외부의 통치 권력에 대한 대안적 삶이자 저항으로서의 민주적 ‘기능 맥락’(김주환 2016)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구성원들을 ‘통합’(사회적 연대)하고 지역공동체 나름의 ‘문화 확립’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와 나름의 규범적 결속을 강화하는 참여적 ‘규범 맥락’(김주환 2016)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래 이 제도의 이상이었던,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는 관 중심이 아닌, ‘활동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민주주의'의 기능적 맥락과 공동체 구성원의 통합과 문화 확립을 위한 '연대'의 규범적 맥락 간의 역동적 동학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 기능적 맥락의 저항 대상은 제도 외부의 통치성이 될 것이며, 규범적 연대의 저항 대상은 제도 내의 수행문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행성 수준에서 경험한 이 개별적인 모순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는 공론장에서 '말해질 수 있는 의제'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제도 내부에 철저하게 활동가 중심인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상의 의제 설정 가능성은 수행성 정치가 다원주의적 정체성 논리에 입각한 정체성 정치의 한 갈래이지만 어떤 육체가 경험하는 '수행적 모순의 공공성'에 의하여 보편적 민주정치와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민주적 수행성 정치의 전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가령, 이와 같은 민주적 수행성 정치 전망은 여성, 장애인, 소수자들의 정치에서도 사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제도 내의 '청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사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과 연구대상이었던 배치된 '활동가' 사이의 관계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제도 밖 지역공동체를 깊이 있게 살펴볼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제도가 생산한 '청년 활동가'라는 정체성에 주목했기 때문인데 생산되어 지역에 배치된 이 '청년 활동가'들의 역할 '수행'이 해당 지역의 제도 밖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02. 『경영과 노동』. 한울아카데미.
- 관계부처합동. 2003.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
- 김권수. 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4(1). 한국공공사회학회. 66-92.
- 김성윤. 201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사회자본론, CSR, 자원봉사활동 담론들의 접합.” 『진보평론』. 48. 진보평론
- 김소연. 2013. 『청년세대 문화정치운동: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수영·오찬욱·문경주·류지선. 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37-381.
- 김우영. 2013.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공공사회연구』. 3(2). 한국공공사회학회. 5-35.
- 김주환. 2016.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동학.” 『기억과 전망』. 35. 93-139.
- 김현민. 2012.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 경험에 관한 연구: (주)노리단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999.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

- 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은진. 2012.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해방촌 ‘빈(賓)집’ 게스트 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0. 『대안적 일터로서의 사회적 기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6-43.
- 박찬주. 2010.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연구』. 3(2). 사회적기업연구원.
- 박해경. 2011.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연구』. 4(2). 사회적기업연구원.
- 버틀러, 주디스. 2016.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 _____. 2008. 『젠더트리플』. 문학동네.
- 버틀러, 주디스·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2009.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박대진 역.
- 버틀러, 주디스·가야트리 스피박.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역. 산책자.
- 서영표. 2013.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진보평론』. 58. 62-85.
- 서울시. 2013.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a. 『마을을 말하다 1』.
- _____. 2015b. 『자립, 탐구생활』.
- _____.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 _____. 2013. 『청년과 마을을 잇는 핸드북』.
- 서울연구원. 2013. 『혁신도시』. 한올아카데미.
- 서울연구원.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연구용역』.
- 신중진 외.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7~2009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56.
- 신충식. 2010.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통치성 연구.” 『정치사상연구』. 16(2). 한국정치사상학회. 131-166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한국도시행정학회. 53-87.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한국공공사회학회. 104-125.
-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 윤재호. 2014. “청년창업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특성과 공유가치창출(CSV)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4』. 한국경영학회.
- 이신모. 2009.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한국경영학회.
- 이왕기·정승현. 2014.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전략: 인천지역 마을활동가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37-150.
- 이영룡·명수민. 2014. “한국 청년세대의 사회적 노동 경험: 2010년대 청년들의 자기 서사와 노동 서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정수남. 2014. “‘잉여인간’, 사회적 삶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노숙인·부랑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 한국사회학회. 285-320.

- 정태석. 2005.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황해문화』, 49. 새얼문화재단. 132-148.
- 조문영·이승철. 2017.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 한국과 중국의 ‘사회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소고.” 『경제와 사회』, 113. 비판사회학회. 100-146.
- 조영훈. 2000.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 사회』, 45. 비판사회학회. 90-113.
- 조주영. 2014.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 『시대와 철학』, 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73-96.
- 주성수. 2017. 『한국시민사회사: 민주화기 1987~2017』. 학민사.
- 푸코, 미셸. 1991. 『권력과 지식』. 홍성민 역. 나남.
- 하현상·이기태. 2017.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51(2). 한국행정학회. 421-459.
- 홍경준. 2000. “한국 복지체제의 개혁과 제3섹터.”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8-234.
-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327~356.

Abstract

**Institutionalized Youth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ommunity Democracy**

A prospect of democracy in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in Seoul 'Local Innovation Youth Activist'

Kwon, Yumi Yonsei University, M.A.

Lim, Eugene Korea University, Under Graduate

This study finds that the 'Local innovation youth activist' system implemented by Seoul city is a combination of 'community' that emerges as a new territory of 'the social' and 'youth' who experiences unstable labor structure. Therefore, the 'Local innovation youth activist' is the subject that is constituted and produced by technology of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inds out various internal conflicts in the actual field of activity through the results of observation of a researcher working as 'Local innovation youth activist' and of interviews with other activists,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 'performative contradiction' within the system.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is 'performative contradiction' is not only a political possibility that can resist and change the technology of community that passes through the body of the youth, but also the prospect of a 'democratic performative politics' that could cope with problems outside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 **Keyword:** Local Innovation Youth Activist, Local Community, Politics of Performative, Governmentality, Performative Contradiction

투고: 2018/10/07 심사: 2018/10/12 확정: 2018/11/20